

데스크탑



정근산
부국장 대우 겸 정치부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19년 4월 목포와 부산 간 388km를 하루한번 오가는 경전선 무궁화호에 몸을 실었다. 열차는 목포역에서 광주송정, 화순, 보성, 순천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42개역을 무려 6시간 33분간 달렸다. 당시 '대장정'은 광주에서 순천까지 116.5km 구간이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건설된 이후 방치되는 등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했다. '느린보 열차 체험'이란 이름이 붙여진 당시 여정은 전 과정이 전남도 누리집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등 90년 소외의 상징이던 경전선의 실상을 알렸고 전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송정에서 순천을 잇는 경전선은 지금 전철화를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5개 공구로 나눠 조만간 발주를 앞두고 있다.

소신·비전 담은 무안공항 승부수

같은 해 김 지사는 에너지산업의 견인차로 꼽혔던 한전공대 설립 절차가 늦어지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종갑 한전 사장을 연이어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부지원과 실시협약 체결의 필요를 댔다. 1,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두고서도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도의회를 설득, 인재양성 요람이란 지금의 입지

를 다졌다. 이듬해인 2020년 김 지사는 방사광고속기 유치전의 중심에 섰다. 김 지사는 당시 유치 서명 운동에 직접 뛰어들어 전남을 넘어 광주시민, 전북 도민들까지 모두 250만명이 넘는 호남인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비록 유치전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한데 뭉치는 호남의 저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지금의 세계 최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치전의 기반을 닦았다.

2023년 5월, 김영록 지사가 공항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대두된 이후 속고를 거듭하던 그가 무안국제공항으로 양 공항 동시 이전을 지역민, 특히 무안군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김 지사가 읽어 내려간 답화문에는 공항을 둔 그의 철학과 소신, 비전이 오롯이 담겼다.

김 지사는 우선 군·민간공항 이전이 광주·전남, 호남 전체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203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등 앞으로 5년이 서남권 거점공항을 목표로 한 무안공항 준폐의 시간으로 진단했다. 짧게는 2025년 KTX 무안공항역이 완성돼 무안공항 활성화의 새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도 상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를 타고 공항에 내려 바로 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강조한 것으로, 인근 청주공항과 김해공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무안공항이 활성화돼야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된다. 무안공항이 활성화 기회를 잃고 침체에 빠진다면 서남권 발전도 없다"는 김 지사의 호소로 집약

된다. 여기에 지금껏 어느 정치 지도자도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는 일을 상상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체에 반드시 지역 최대 현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재선 도지사의 정치적 책무도 뚜렷이 읽힌다.

'지역발전' 해내야 한다는 책무

군·민간공항 무안 동시 이전이란 승부수를 꺼낸 김 지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당장 여의치 않은 주변의 여건은 비판적 시선을 부추긴다. 특별법 제정이란 큰 산을 넘었음에도 군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국방부 입장에서 광주에서 군공항을 빼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합평이든 무안 이든 외딴지 않는다. 느긋하다. 이는 곧 강기정 광주시장의 다급함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합평이란 패를 쥐고 흔들며 대는 강 시장의 판에 굳이 김 지사가 발을 담가 부담을 온전히 뒤집어쓰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김영록 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전선과 한전공대 등에서 보여줬던 김 지사만의 '뚝심'이 이것이다. 기저엔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렸다. 반대 일변도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무안 지역사회의 기류 변화는 이의 연장선이다.

김 지사는 지금 묵묵히 감내 중이다. 몇 번이나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선 일선 군수의 '무례'를 보면서도, 혀를 차며 방관하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냉소'를 보면서도 여전히 감내 중이다. 그러면서 분명 큰 그림을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터다. 그게 김영록 지사가 보여줬고, 보여주고 있는 '뚝심'이다.

해양기상정보와 함께 안전한 바다 즐기기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해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다.

바다는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바다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기상정보의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500여 건에서 2021년 2,7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상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해양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상 안전 지킴이로서 기상청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법으로 2019년부터 '해양기상정보포털'을 구축해 어업, 해상교통, 해상물류, 레저스포츠 등 다양한 해상 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항로, 항만, 어업, 레저, 안보, 해무 등 6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측자료, 예보 및 특보 등을 PC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 주변의 수온과 파고까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해양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해양기후 월별 수온과 파고 자료도 신규로 추가해 제공 중이다.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는 바다에서 필요한 기상정보를 한눈에 모두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는 안전(60%), 어업(53%) 순이었으며, 사용자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높았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유용한 신규 서비스도 발굴해 추가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아직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섬 여행 일정을 잡아 보는 건 어떨까?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무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 해양기상정보 포털에서 미리 바다 날씨 정보를 찾아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 여행은 '농촌체험 팜스테이'로

을 말할 수 있는 '농촌 힐링여행'을 떠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농촌체험 팜스테이' 말이다. 팜스테이는 농장(farm)에 머무는(stay) 여행이다. 농가에 숙식하며 농산물을 수확하고 시골 문화도 체험하는 일종의 '농촌체험 여행프로그램'을 말한다. 팜스테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도농상생'을 위한 취지에서 1999년 농협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

300여 개의 팜스테이마을이 운영 중이다. 특히 각 마을마다 지역특색에 맞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바야흐로 코로나 엔데믹시대다.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팜스테이 마을에서 힐링해 보는 것은 어떤가.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 姜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관리국 (062) 720-1012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사회부 (062) 720-1050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도시민 유입 아이디어 지속 발굴을

강진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인구소멸, 지역소멸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진군은 민선 8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보면 먼저 빈집을 빌려 예산을 투입, 리모델링한 후 도시민이나 귀촌인이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외지인 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입하면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 읍·면사무소의 접수 결과 빈집 30여기, 20여기구 리모델링 의사가 접수됐다. 강진군은 장기 임대 빈집 6채와 자가 거주 빈집 2채 등 총 8채에 대해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고 한다. 빈집 리모델링은 창호 및 도배·장판 교체, 방수·단열 작업, 배수시설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개·보수 공사를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작은 정원과 텃밭을 조성해 시골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정서를 도시민에게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송정역 주차난 해소 기대 크다

차량 1,5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이 31일 오전 9시부터 개장한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추진해 2021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송정역 주차빌딩이 2년여 만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동안 고질적 주차난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반가움이 크다. 송정역 주변은 주차난으로 인해 평상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왔다.

역 주변 임시로 운영됐던 6개 주차장은 평일 낮에도 늘 '만차' 표지가 내걸려 있어 주차공간을 찾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자리가 남아있는 주차장은 역사와 함침 떨어진 먼 곳이라서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통근열차가 운영되고 있지만 KTX나 SRT 시간과 연동되지 않을 때는 택시 등 대중교통과 승용차 등이 비슷한 시간대에 몰리며 일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어왔다. 때문에 주차빌딩 완공을 기다려왔던 시민들의 반가움과 기대는 이루말할 수 없이 크다. 이번에 완공된 주차빌딩은 지상 7층 규모

도시민의 발길을 붙잡고 정주를 돕는 이 같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 아이디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실시할 기대한다. 도시민 가운데는 농촌으로 오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과 정착 방법을 잘 몰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굴했으면 한다. 얼마 전 화순에서 월 1만원의 임대료 아파트(20평)를 내놓은 것은 획기적인 사업으로 전국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그만큼만 인구 유입 대책으로는 큰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 완전히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짜고 선보여야 한다. 화순의 1만원 아파트는 결코 일회성 퍼주기 아니며 삶의 계획을 좀 더 큰 시각에서 세워보게 하는 좋은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시행 초기 도시민의 유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도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낼지 더욱 고민해야 한다.

로, 지역 최대 규모인 차량 1,58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은 일반형 882면, 확장형 494면, 장애인용 48면, 경차 전용 156면 등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기본 30분에 1,500원이며, 10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1일 이용권은 1만 5,000원이고 열차 이용객은 30%, 경차·친환경차·장애인·유공자 등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정역 주차빌딩은 기존 주차면적이었던 401면의 4배 수준으로, 송정역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주차빌딩 이용 편의를 위해 요금 사전정산기, LED 안내 전광판, 주차현황판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 신호주기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운영 초기 원활한 이용을 위해 동선 및 이용법을 안내할 안내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장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오월 광주정신'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지수첩



최환준

사회부 차장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지만 '국민대통합'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역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치달고 있다.

5·18 일부 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는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을 강행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고, 또 이들 공법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고소를 이어가면서 극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심지어 추모제가 열린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이들 단체와 강시장이 고성을 지르며 다툼을 벌여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동안 5·18 역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 여러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며 형성된 '오월 광주정

신'은 세계사에도 그 유례가 드물게 자치공동체를 실현했으며,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인 지표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의 저항과 참여, 연대의식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 중요한 민주화운동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오월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에 힘을 보태야 할 이들이 정작 올바른 기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안타까운 따름이다. 수십년간은 폐되고 왜곡된 오월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펼쳐왔으나 이제는 돌로 나뉘어 다툼을 벌이면서 화합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훗날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미래세대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척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5·18'로 인식이 확산될까봐 우려스럽다.

때문에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진상규명, 오월 정신 전국화·세계화는 갈등과 분열 속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또한 올해 활동 종료로 앞둔 조사위가 헬기사격과 발포명령자, 암매장 소재 등 진상규명 작업에 성과를 낼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5·18은 신군부 세력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아닌 대한민국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협치와 화합의 길을 나아가길 바란다.